민주 "내란 특검법 공포…추경 편성" 최 대행 압박

이재명 "경제 심장 다시 뛰게해야"
박찬대 "내란 진압없이 극복 요원"
양당 정책위의장 추경 논의 실패
국힘 "지금은 때 아냐…검토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수정안 공포와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경제, 군사, 문화 강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집권 이후 완전히 추락했다"며 "우리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GDP가 6조3010억원이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에도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공개한 후 "국회 예산을 완전히 없애라,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라며 "최 대행이 거부권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내란 동조 혐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죄 은폐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다.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민주당이 25만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이라며 "(지난해 9월에도) 여당이 끝까지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다.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처리가 예상되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민주당도 처리하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협의·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형배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법 문체위 통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광주관)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 (1998년), 서울관 (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이 있다.

대전관은 오는 2026년 개관 예정이고, 영남권에는 진주관이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서 국비 예산이 반영됐다.

호남권에만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자원한 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관 유치를 추진해왔다.

민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올해 첫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20일과 21일 제22대 국회 임기 첫해 의정 성과와 정국 현안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지역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20일 고흥군과 보성군, 21일 장흥군과 강진군에서 주민들을 만나 4차례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 유지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비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이 주신 귀중한 의견을 토대로 새해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광주·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법안 발의

광주와 화순 일대에 갖춰진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연구지원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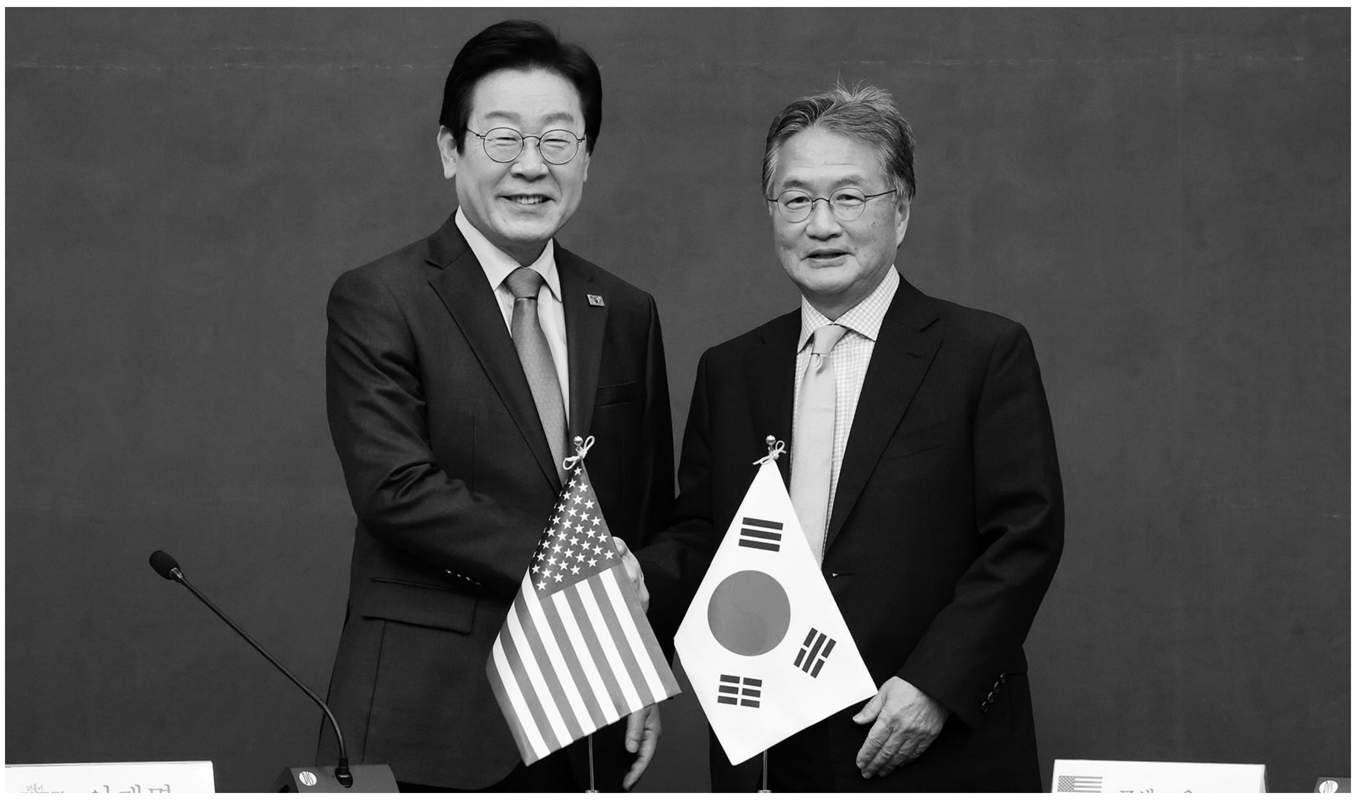
안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광주와 화순 일대에 4개(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화순 전남대) 종합병원과 첨단의료기기(광주테크노파크 등), 백신산업특구 등 바이오연구·생산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이 지역에 연구개발 및 장비 투자와 함께 혁신적인 임상시험 등의 규제 완화만 해주면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신약·신의료기기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한·미 동맹' 강조… 북미 대화 재개 환영

"한미 관계 발전 함께 노력"
"트럼프 시대 실용적 대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윤 대사대리가 국회, 민주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일관된 지지에 대해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강화·발전시키고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트럼프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정부 감액권' 추가 지역화폐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22일 재발의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의 법상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의 '감액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여권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재원에 대해선 "빨리 논의해서 오는 2월엔 통과시켜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